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공감과 통합의 정부

김도한
교수 · 행정학



치명적이면서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위기는 재난의 순간 정부의 능력과 가치관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방향은 어떠한가?

코로나19는 그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개인적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코로나19는 나이를 구분하여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청·장년층에게는 대체로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호흡기 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건강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는 직업에 따라서 차별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조치는 카페나 음식점, 주점을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생존에 위협이 될 정도의 큰 손실을 가져온다. 자가 격리 조치는 어떠한가? 넓은 평수의 아파트나 주택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계층은 자가 격리가 개인적 불편 정도로 받아들여지지만 쪽방이나 고시촌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계층이나 기숙사에서 집단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코로나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고 또 자가격리도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들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정부 방역정책을 다르게 인식한다. 가족 중에 노령의 부모님이나 호흡기 질환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 정책이 충분치 못하다고 걱정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건강한 청년의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제한 조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과 같이 느껴지며 그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가 미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전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자영업자들의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정부는 사회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정부는 공감과 통합에 앞장서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과 접촉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

희생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고개를 끄떡이기도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기숙사에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했다는 기사는 종종 눈에 띄지만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소외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찾기 어렵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정부는 사회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갈등과 혐오는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토마스 피케티의 세계불평등데이터연구소(World Inequality Lab)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상위1%는 전체 자산의 25%를 점유하고 있으며 상위10%는 전체의 58%를 점유한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그 차이는 코로나19 기간에 더욱 확산됐다. 이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꼰대’라는 표현은 세대 간의 간격과 갈등을 상징하며 이 대담과 페미니즘으로 표현되는 젠더 갈등 역시 결코 쉽게 접근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는 우리 사회의 난제이다. 난민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 역시 편견과 혐오가 존재한다.

정부는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많은 예산을 들여 ‘사회규열감소통합촉진미래지향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문화과정을 거쳐 새로운 정책을 설계하거나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갈등해소미래통합부’를 신설하는 노력도 필요하겠

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경험에 기반한 행동의 전염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 않을까? 미국의 심리학자 고든 올포트(Allport)는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을 통해서 편견, 증오, 인종차별은 접촉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웃이 된 사람과는 더 이상 혐오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권위 있는 제3자의 감독 아래 서로 다른 집단의 구성원이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긍정적 접촉을 경험하게 된다면 타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정부는 공감과 통합에 앞장서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과 접촉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공무원과 정치인의 선발에서 다양한 삶에 대한 경험과 공감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포함돼야 한다. 공공관리 전문가인 하버드 대학의 벤(Behn)교수는 자신의 칼럼에서 정부 공무원의 동기 부여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선발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일단 잘못된 가치를 지닌 이를 선발하고 나면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이들을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단정적으로 조언한다. 공감할 수 있는 준비된 이들을 선발해야 한다.

둘째, 평가에 반영한다.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와 승진, 그리고 봉급이다. 인사평가에 있어서 다른 집단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고려되면 조금씩 공감이 확산될 수 있다. 셋째, 교육 훈련과정에 공감의 경험을 강제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수행 평가를 위한 자원봉사의 경험은 때로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봉사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보았다. 타자와 공동으로 게임하고 협업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한다면 그것이 시작이 될 수 있다. 끝으로 직접 경험이 어렵다면 소설이라도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 정세라의 『시선으로부터』를 읽으면서 이민자와 여성으로의 삶을 감정 이입해 보고, 임성순의 『오히려 다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를 통해서 내전과 갈등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대리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무원 정원은 약 1백만 명이 넘는다. 사회복지사, 교사, 경찰, 정치인, 판사들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이러한 선의는 코로나19보다 더 강한 전염력으로 그 서비스의 대상자인 국민 개개인에게 전염되고, 또 다른 집단으로 확산돼 사회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